

신 산업

0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완화

02 글램핑, 조립식 돔텐트로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기기

03 인공지능(AI) 기반의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04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공개 확대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2022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0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완화

추진부서 경기도 화성시 공원조성과 ☎ 031-5189-6131

개선배경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 등의 차원에서 20년이 경과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 도입됨. 그러나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을 방지코자 2005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용도지역 신설
- 동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린벨트 등과 같이 엄격한 행위제한 수반
 - 이에,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존 건축물, 주차장 내 태양광 시설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미허용 시설로 설치 불가,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과 소득 창출을 위한 건축물 등의 효율적인 활용이 지난
 -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

개선내용



개선 전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하여 행위제한, 설치 불가



개선 후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설치 가능으로 개선





- '21.01.13.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 '21.06.17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 선정 (국무조정실)
※ 전국적으로 총 338건의 과제 제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을 통하여 최종 32건에 선정
- '21.12.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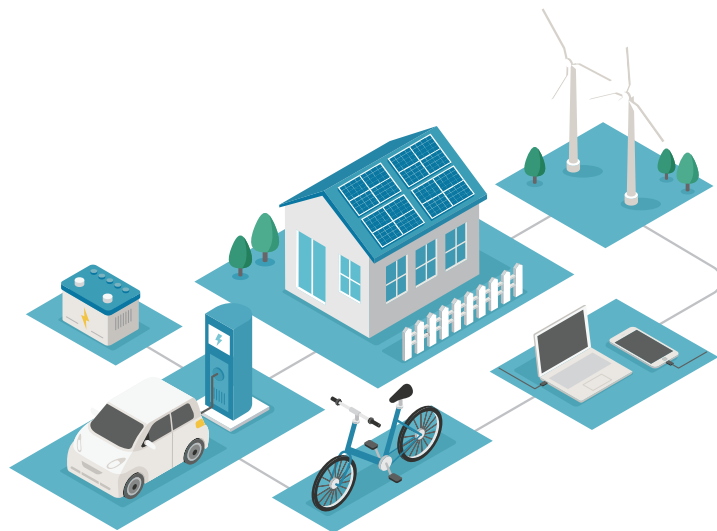
개선효과



- 소외 지역에 대한 태양광에너지 활성화로 관련 산업 발전 기대
- 지속적인 행위제한 완화로 토지소유자(점유자) 민원방지 저감 기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원활한 관리 유도
- 태양광 발전에 따른 수익창출로 일부 소득증대 기대

[설치비용] 200kw 이하의 경우 설치금액의 70~80%까지 지원 (일반 주택용 3kw 설치비용 약 516만원으로 보조금 지원시 103만원 자부담)

[수익창출] 일반 주택용 3kw 태양광 설비 기준, 月 약 300kw 전력생산 (월 5~6만원 전기요금 절감 예상)



[태양광에너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불가능을 가능으로 규제혁신 하다.



화성시 공원조성과 원찬희 031-5189-6131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일몰제가 시행됨으로서 당초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가 일소(一掃)에 해제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해당 토지주, 점유자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도시공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차에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 과제” 제출을 요청받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치 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21.12.2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이로인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위치한 공장, 축사, 일반주택 등의 건축물과 주차장에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소득창출이 기대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기존 공공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 글램핑, 조립식 돔텐트로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긴다.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287

개선배경



- 국내 캠핑인구가 300만명에 이르고, 캠핑시장도 6,000억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하는 등 야영(캠핑) 활동이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글램핑 시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령은 야영시설을 경직된 개념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제품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었음.
-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시설은 천막을 주재료로 하여야 하므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돔 제품은 제한되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도 모호한 상황임.

[애로사항] 해당 제품은 기존 천막텐트 대비 자연재해 및 화재에 강하여 단열과 방풍 기능이 우수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이어서 사용기간도 길어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따른 규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음

※ 관련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 2관련, 「별표 1」 야영장 시설의 종류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소재의 조립식 돔텐트 제작 가능**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야영시설은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며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어,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을 사용한 조립식 돔텐트는 제작이 불가능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동별 크기 및 복층구조 제한 등 안전기준을 이행하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진 텐트를 야영장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

*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s), 플라스틱 수지 사이에 유리섬유를 넣어 강도를 높인 소재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특례를 받아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로 제작되고, 분해·조립이 용이한 조립식 돔텐트를 야영장에 판매 가능

[글램핑용 돔텐트 구조 및 형태]



'21. 03. 17.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21. 04. 20.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기업 면담 실시

'21. 06. 01. 산업융합 규제실증특례 신청

'22. 02. 25. 제1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결과, 실증특례 승인

'22. 04. 18.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대상 선정(실증사업비 등 지원)

개선효과



- 기존 천막텐트 대비 단열과 방풍기능이 우수해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이 가능하여 안락한 야영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야영시설 제작·판매가 가능하고, 반영구적이어서 기존 천막텐트보다 사용기간이 길어 설치하는 캠핑장의 만족도 제고
- 캠핑 이용객들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야영장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03 인공지능(AI) 기반의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287

개선배경



-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반려동물 등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호기심에 의한 분양과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마다 약 12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음.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지 8년여가 지났으나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동물등록제 등록률(농림축산식품부) : 2018년 20.5%, 2019년 24.4%, 2020년 27%, 2021년 37.4%
-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이유로는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응답이 35.5%로 가장 높았으며, '동물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7%, '동물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라는 응답이 16.8% 순으로 나타남.
-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대상 동물임. 이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따라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체내주입형, 외장형)로 한정되어 있으며, 동물안면인식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였음.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몸 안에 칩을 넣거나 동물개체정보가 담긴 목걸이 또는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는데, 칩 방식은 반려동물에게 통증을 주기 때문에, 목걸이와 인식표는 분실의 위험이 있어 반려인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있었음.
-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등록 서비스로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하여 등록이 가능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동물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체내주입형, 외장형)로 한정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

→

- 인공지능(AI) 기반의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동물등록 방법은 보호자가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무선식별장치 체내주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음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 서비스]



- '21. 06. 04.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신청
- '21. 06. 21.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기업 면담 실시
- '21. 07. 15. ICT 규제실증특례 신청
- '21. 12. 23. 제21차 ICT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결과, 실증특례 승인

개선효과



- 등록비용이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하여 동물등록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유기·유실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비용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실증특례 승인으로 인한 효과]

- 투자유치** : 2022.10월 현재 Angel 5억 및 VC 프리A 5억의 총 10억 투자유치 진행 중이며, 계약을 위한 사전 협의단계
- 매출현황** : 2021년 약 1천만원에서 2022년 2억으로 향상, 사업계획서상 2023년 매출은 약 41억으로 추산(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양수도 계약)하여 개인사업자 매출포함)
- 고용창출** : 2021년 1명, 2022년 2명 고용 / 2023년 7명 추가 고용 예정으로 향후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효과를 봄

04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공개 확대

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 031-8008-4287

개선배경



- 자율주행 기업 등에서 정밀 도로지도를 자체 제작한 경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4조 및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 분류상 공개가 제한될 수 있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필수적인 정보이나, 공개제한으로 인해 자율주행 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 운전자가 시스템에 개입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정해진 도로와 조건에서 스스로 운전
- 또한 국내 정밀지도의 해외 공개가 제한되어 있어 자율주행 기술개발의 국제협력 활성화에 한계 발생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4조 및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 분류 상 공개가 제한되어 학술연구,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제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개선으로 산업계에서 공간정보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됨.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2항 신설

'21. 01. 13. 규제혁신 방안 국조실 건의 (도 → 국무조정실)

'21. 06. 17. 국무조정실 '제7차 신산업 현장으로 규제혁신 방안'에 선정

'22. 03. 15.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2항 신설

개선효과



- 3차원 정밀지도를 산업계에 제공하여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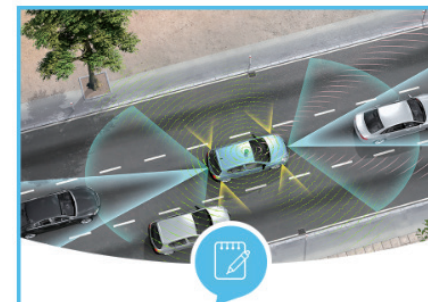
스트레이트뉴스

HOME > 전국

3차원 정밀지도, 산업용 활용가능...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조항재 기자 | 승인 2021.07.02 15:28

경기도,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4건 정부 제7차 신산업 현장으로 규제혁신 방안에 선정
국무조정실 '제7차 신산업 현장으로 규제혁신 방안'에 경기도에서 건의한 신산업 규제혁신 건의
과제 4건 선정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 디지털 트윈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도시공원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확대,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태양광 설비 설치 허용 등 담야



자율주행차 시대!
3차원 정밀 지도로 안정성을 높인다.

